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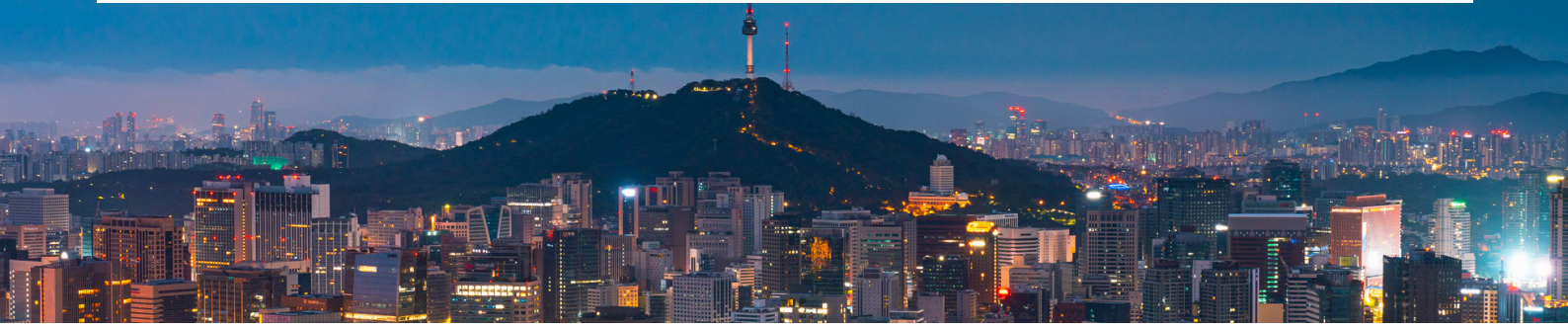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20호: 2026년 7월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비스 마자르 및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핵심 요약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최근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다시 명확히 했으며, 국세청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더 보기](#)

인사 & 급여 업데이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8월부터는 자녀의 방학·휴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보기](#)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20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6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했습니다. 국외매출,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충당부채를 비롯해 장기공사계약, 지분법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주요 점검 분야와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더 보기](#)

사업비정산 업데이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해 회의비 사전결재 의무를 폐지하고 연구혁신비를 신설했습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연구기관이 준비해야 할 실무상 대응사항을 살펴봅니다.

[더 보기](#)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최근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으며, 국세청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대법원 판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은 한국 자회사가 영국 중간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영국법인이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사용·향유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 등 상위 지배회사에 이전할 계약상 또는 사실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한·영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중간지주회사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사업활동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소득에 관한 경제적 처분권과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당금 수령 직후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이 상위회사로 송금되는 구조, 그룹 내부 문서상 조세효과를 고려한 구조개편 정황, 중간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524).

- **실무 시사점:**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빙, 현금 흐름 및 그룹 거버넌스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 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거래가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매매사례의 거래 규모,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 간 관계, 거래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가장 최근 거래 가액” 또는 “단일 매매사례가액”을 자동적으로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해석입니다. 특히 M&A, 그룹 내 지분 거래, 임직원 보상 목적의 주식 거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매매사례의 비교가능성과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문서화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전법규법인-207, 2026.5.29).

- **주요 내용:** 비상장주식 거래 전에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의 거래 규모, 독립성, 거래 조건 및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 시사점:** 특수 관계자 간 거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가 있는 경우, 외부 가치평가 보고서와 함께 이를 적정하다 판단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역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8월부터는 자녀의 방학·휴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6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간 평균한 값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5년 7월 ~ 2026년 6월	2026년 7월 ~ 2027년 6월
하한액(부담금)	400,000 원 (18,000 원)	410,000 원 (19,000 원)
상한액 (부담금)	6,370,000 원 (302,570 원)	6,590,000 원 (313,020 원)

단기육아휴직제도 신설(2026.8.20 시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의 휴원 또는 방학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주 단위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주 단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사용기준	· 사용 사유: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 사용 단위: 1주 또는 2주(3일, 9일 등은 사용 불가) · 사용 횟수: 연 1회 · 기간 산정: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구분	현행	개정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 지급 가능	‘단기육아휴직’에 한하여 7일 이상 사용시 급여 지급 가능

인사 & 급여 업데이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이 2026년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종 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2026년	2027년
시급	10,320 원	10,700 원
월급	2,156,880 원	2,236,300 원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2026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6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했습니다. 국외 매출,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충당부채를 비롯해 장기공사계약, 지분법 회계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주요 점검 분야와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금융감독원,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인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 시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매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를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의 총 4가지 회계이슈가 선정되었으며, 2027년 중 해당 이슈에 대한 중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출입 규제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국외 매출 관련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인식 오류 및 매출채권 손상 인식 미흡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외 매출은 거래 형태가 복잡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이 달라지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 인도조건(FOB, CIF 등)에 따른 선적·인도 시점과 수행의무 이행 시점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 수출입 제한 등 외부 환경요인은 손실충당금 측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 해외 종속기업 및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 그룹 차원의 회계정책 적합성과 내부통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대상 선정

-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주요 대상입니다.
- 국외 매출 규모 및 중요성, 해외 거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국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도조건별 수익 인식 정책과 내부통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산정 시 거시경제 변수 및 국가별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회계정책 및 데이터 적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재고자산은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항목으로,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에 대한 경영진 판단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의사항

-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개별 항목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사성이 없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순실현가능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되어야 합니다.
- 확정판매계약, 생산계획 등 재고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장가격 하락, 수요 감소, 기술 진부화 등은 재고 평가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사대상 선정

-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재고자산 규모, 평가손실 인식 수준 및 변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기업은 재고자산 평가 시 단순한 정책 적용이 아닌 시장환경 및 판매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추정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미회전 재고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고 품질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요구됩니다.
- 손실부담계약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재고평가와 충당부채 인식 간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금융감독원,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투자부동산은 분류, 측정, 공시 전반에 걸쳐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그간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해 온 분야입니다. 이번 중점심사에서는 특히 분류 정확성 및 공시 충실성이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의사항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목적 여부에 따라 자가사용부동산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장부금액 변동, 평가방법 등은 주석에 충실히 공시되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 사용 목적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대상 선정

-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이 대상이며,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투자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시사점

- 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 임대 비율 등을 분석하여 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 시 사용된 가정 및 평가기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외부 평가기관 이용 시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 주석 공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체크리스트 기반 검토가 효과적입니다.
-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한 경우 손익 변동성에 대한 추가 분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당부채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는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크게 개입되는 영역이며, 최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재무제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 존재,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 위험과 불확실성 및 미래사건을 반영하여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우발부채는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가 필요합니다.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보고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심사대상 선정

-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이 대상이며,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성, 관련 공시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시사점

- 법률서신,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현재 의무 존재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충당부채 측정 시 사용된 가정(확률, 할인율 등)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후속사건 검토를 통해 보고기간 후 발생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 전문가 의견(법률,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영진 판단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다음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①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 ② 지분법 회계 처리, ③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④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총 4가지 이슈가 선정되었으며, 2027년 중 해당 이슈에 대한 중점심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회계오류 사례 및 경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비상장회사 재무보고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은 진행률 추정 등 경영진의 판단이 크게 개입되는 영역으로, 수익 인식의 적정성이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진행률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측정하고 매 보고기간마다 재측정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예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선정배경 및 선정기준

- 진행기준 적용 판단 오류 및 진행률 과대 산정으로 인한 수익 과대계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 건설업 및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 대비 공사미수금, 계약부채 비율,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 공사진행률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기준과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원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수익 인식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가 집계, 진행률 산정 근거 및 주요 가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 회계처리는 유의적 영향력 판단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유의사항

- 지분율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고,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이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선정 배경 및 선정 기준

- 지분법 적용 여부 판단 오류 및 회계처리 미흡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본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높은 회사 및 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심사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투자구조 및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지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 피투자기업 재무정보의 입수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 지분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충당부채 인식 · 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는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크게 개입되는 영역으로, 공시 누락 위험이 높은 분야입니다.

유의사항

- 현재 의무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 및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 충당부채는 불확실성 및 현재 가치를 반영한 최선의 추정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 우발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배경 및 선정기준

- 충당부채 과소계상 및 우발부채 공시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본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 충당부채 변동성, 비율 및 지급보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소송, 지급보증 및 계약상 의무 등을 포함한 잠재적 의무를 식별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충당부채 측정 시 적용한 주요 가정과 추정 방법에 대한 합리성과 일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우발부채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공시의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법적 형식뿐 아니라 실질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채권 · 채무 잔액 및 거래 성격 등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 투자계약 조건 등에 따라 금융부채 분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 배경 및 선정 기준

-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및 왜곡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 및 전환증권 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사점

- 특수관계자 식별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및 지배구조 정보를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거래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집계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 풋옵션 등 계약조건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비정산 업데이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해 회의비 사전결재 의무를 폐지하고 연구혁신비를 신설했습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연구기관이 준비해야 할 실무상 대응사항을 살펴봅니다.



사업비정산 업데이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회의비 집행을 위한 사전 내부 결재 의무 절차가 연구 현장의 대표 행정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최근 정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비 제도를 개선하고, 2026.0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의비 사전결재 의무 폐지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비 사용 기준상 회의비 사전 결재 의무가 폐지되면서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긴급한 기술회이나 연구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결재 절차 때문에 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결재가 없어도 증빙은 필요하며 정산이나 사후 점검 과정에서 다음의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 회의 목적
- 회의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명단
- 회의 내용
-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즉, “사전 통제”는 완화되었지만 “사후 관리”는 계속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비 정산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과 연구 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연구혁신비 도입 및 주요 사용기준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연구혁신비의 도입입니다. 연구혁신비는 연구자가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구비 항목인데요. 기존 연구비 체계는 세부 항목별 사용 제한이 많아 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된 항목이 연구혁신비입니다.

연구혁신비의 주요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금액 합이 10퍼센트 범위 내 계상 (단, 연차별 평균 5천만 원 초과 계상 불가)
- 사용불가 항목
 - 건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재료비성 비용
 - 건별 5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활동비성 비용 (외부전문가활용비는 금액무관 집행 불가)
 -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 연구혁신비의 증액은 사전 승인 필요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을 입력한 경우 증명자료 불필요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도 식비 계상 가능

사업비정산 업데이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연구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부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의비 관리 절차 정비
- 증빙자료 관리체계 개선
- 연구혁신비 집행 가이드 마련
- 연구자 대상 교육 실시
- 내부 연구비 규정 개정

특히 기관별 내부 규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이지 ‘관리 폐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관리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회의비 사전 결재 의무는 완화되었다.
- 회의 개최 근거와 참석자 증빙은 여전히 필요하다.
- 연구혁신비가 도입되어 연구비 활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 정산 시에는 연구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후 점검에 대비한 자료 관리는 계속 중요하다.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와 연구혁신비 도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를 ‘사전통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수행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정산과 사후 점검 과정에서는 여전히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연구비 관리의 핵심은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8.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과세표준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1%	4.1%
국민연금	4.75%	4.75%
고용보험	0.9% + (0.25% ~ 0.85%)	0.9%
산재보험	0.7% ~ 18.6%	-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6% ~ 28.6%	월 평균보수의 약 9.75%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이정민

대표이사, 감사 및 인증 총괄

jung-min.lee@forvismazars.com

박승하

파트너, 부회장, 세무

seung-ha.park@forvismazars.com

심현호

파트너, 코리안 데스크 총괄

hyun-ho.shim@forvismazars.com

줄리앙 에르보

리드 파트너, 아웃소싱 및 국제 데스크

julien.herveau@forvismazars.com

심규택

파트너, FS (금융기관) 총괄

gyu-taek.sim@forvismazars.com

정상안

파트너, 세무 총괄

sang-an.jeong@forvismazars.com

Forvis Mazars Group SC는 선도적인 글로벌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인 Forvis Mazars Global의 독립 회원사입니다. 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 통합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비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인 Forvis Mazars Group SC의 독립 회원사로서 1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세무, 자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이정민,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정상안, 박동원, 김양규, 장유미, 강민경, 공태희

© 2026년 7월

forvismazars.com/kr

forv/s
mazars